

# 보다 거시적 안목의 정책추진 절실



〈세미나에 참석한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들〉



〈주제발표하는 정근모박사〉



〈질의응답에 귀기울이는 참석자들〉

지난 10월 10일 한국에너지협의회와 한국에너지연구회는 에너지산업의 당면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올림피우스호텔 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제발표를 담당한 전과학기술처장관 鄭根讓박사, 座長인 金浩卓박사(서울대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토론자로 崔基鍊박사(대체 에너지개발센터 소장), 林載春국장(과기처원장력정책관), 田載豊처장(한전전원계획처) 등이 토론에 나섰다.(분야별 토론요지 별항)

사회자인 김호탁박사는 개회사에서 “경제의 자율화는 일반경제이론의 원리이며 70년대까지의 발전단계에는 정부의 통제가 효과적이었으나 이제는 개방화 자율화의 물결에 따른 정책의 추구가 그 주류이며 석유가의 규제를 해제한 최근의 정부조치가 그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전제하고 오늘 세미나도 그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의 진로를 모색해

보는 것에 뜻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정근모박사는 「탈규제하의 에너지부문 해결과제」에 대하여 약 1시간에 걸쳐 견해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 동력자원정책의 기초가 지난 70년대는 석유위기당시에 수립되었던 적자경제체제하의 단기적 위기수습 전략이었으나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였다.

정박사는 또한 “우리의 동력자원정책이 경제사회의 변화기조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동안 규제위주의 단기처방에 머물러 왔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허부구조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정박사는 앞으로 대외개방형 민간주도 에너지개발체계를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지방자치시대에 대한 고려, 국제시장변화에 대한 적응등도 지적했다.

에너지산업개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동구권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

박사는 동구권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데는 10~20년의 시간과 1조 2천억원의 방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한편 우리는 현재 에너지문제를 너무 쉽게 보는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정박사는 이제 우리의 에너지자원정책도 단순 월별 이슈별 전략에서 벗어나 종합적으로 연계된 모델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데이터 베이스」의 보완이 서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박사는 에너지정책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루어야하며 5개년계획에 맞추어나가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에너지절약도 소비자이의를 고려한 효율향상, 기술향상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박사는 에너지정책을 전담하는 동자부가 갖추어 나가야할 기능으로 ① 자원안전보장 태세의 구축, 견지 ② 에너지자원사업의 발전 도모 ③ 시장수급의 안정화 소비자 이익보호 및 유통효율 제고 ④ 국민경제의 에너지 효율 제고 ⑤ 에너지 자원분야 첨단기술의 개발 촉진 실용화 도모등 12개항을 제시했다.



〈金浩卓박사〉



〈崔基鍊박사〉



〈林載春국장〉



〈田載豊처장〉

## 정책종합조정체계의 확립필요

崔基鍊 박사

주제강연에서 환경·이용합리화·데이터베이스 문제 등 중요한 문제들이 언급되었다. 이것은 에너지源別 産業에 이제까지 통합시스템이 갖추어져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原子力産業이 정부주도하에 추진되어 타산업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듯이 에너지源別 조정기구와 에너지절약전담기관 같은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동력자원정책은 개방화 자율화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선 에너지시장 진입을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電力産業에 석유산업, 가스산업, 열병합발전사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규제도 일시에 개방하지말고 공급방식 개정등의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할것이다.

에너지산업의 대기업적 특성등을 고려하면서 개방화 자율화를 지향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대처방안으로는 ① 에너지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체계의 확립을 위해 업체간의 이해상충을 막을 수있는 지침체계와 조정원칙의 수립이 절실하다. ② 에너지산업은 공급자는 소수이나 강하고 소비자는 다수이지만 약하다. 정부의 탈규제정책의 추진은 이 조정열함을 해야한다. ③ 탈규제가 이루어지면 에너지원별간의 경제적 평가가 달라지며 에너지업계에서 이에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④ 전력사업등 대외자금에 의존한 경우 외환정책 정부투자금융정책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⑤ 에너지는 환경문제를 수반하므로 에너지산업체들이 「클린·테크노로지」에 대한 개안(開眼)이 절실하다.

대부분의 에너지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적 여건하에 있기때문에 어느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전력의 경우 초기에 막대한 자본투자를 해야하며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신경체계를 이루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우리의 현실은 산업사회로 발전한 역사가 짧고 과거에는 日本式규제를 도입하여 이에 익숙해있고 해방후에는 美國에 의존하는 경제개발을 추구하다보니 미국식규제가 복합되어 우리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요소가 많다.

① 이제 정부의 규제는 우리의 현실여건에 맞는 컨센서스를 통한 규제이어야 하며 과거규제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② 규제이든 아니든 국민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적으로 국민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산업분야 특히 전력사업은 사회적인 저항이 심한데 이것은 이해부족에서 오는 것이므로 국민홍보를 강화하여 공

## 제도개혁에 광범위한 의견수렴

田載豊 차장

감대를 형성하는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전력산업의 다원화문제로서 수직분할 수평분할론등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발전분야에서 정부가 민간참여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배경은 전원개발 소요자금조달, 공기업의 경영효율성등의 문제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에게 특혜를 유발해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역기능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당국에 부탁하고 싶은것은 어떠한 제도의 변경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개적토론을 거쳐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주었으면 한다.

실적위주로 해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검토하고 역기능을 저를수있는 충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모든사업 국민의 이해와 협조 바탕

林載春 국장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면 표면적으로나 총체적으로는 이의가 없으나 이에 대한 세부책크에 들어가면 조금도 진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차세대원자력개발 즉 신형원자로개발은 연구회를 구성 이견을 절충하여 최종적으로 공급위주의 연구개발을 수요위주로 바꾸어 완성하였다.

장기전원개발계획도 과거처계획과 동자부계획의 차이가 있었으나 기술의 수요처인 한전의 장기계획을 원안으로 하여 조 절해 이루어졌다. 장기전원개발계획이 발표되어 2006년까지 85기의 발전소 건설에서 18기의 원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정부의 확고한 확신과 국민의 완고한 불신의 갭이 너무나 크다.

예를 들어 핵폐기물처리에 있어서 그 지역의 다대수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지막 몇사람의 반대로 벽에 부딪치고 만다.

지방이기주의, 기업이기주의 또는 부처이기주의 등의 대두가 모든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얼마전 강릉에서 폐기물부지확보 문제로 토론회를 가질려고 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이를 중단하지않을 수 없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정부가 설악산 금강산을 연계하여 관광특구로 설정할것을 검토중이라는 발표를 했을때는 땅값이 상승해서 지역발전을 기대했는데 한전이 부지조사에 착수하자 그순간부터 지가가 40%가 하락했다는 것이며 서울에서 쓰는 전기인데 우리지방에서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은 이렇다치고 부처간의 업무조정을 위하여는 끝없는 논쟁이 지속되지만 결국은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 개인의 마음은 비울수 있으나 조직의 마음을 비우기는 매우 힘든일이다. 대국적 안목이 필요한 때이다.

## 질의 응답요지

### Q. 원자력개발의 국민합의 도출은?

박정근박사(한전전력연구실)  
앞으로 소련과 동구권이 경제성장을 이룰때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다면 제3의 에너지과동이 초래될지도 모른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원자력개발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범국민적인 협조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 Q. 전원개발에 환경문제반영 어느정도 고려하고 있나?

辛基祥호장(電友클럽)  
세계적 대세로 보아 장기전원 개발계획에도 환경문제 반영이 절실하다고 본다. CO<sub>2</sub>의 규제문제가 어느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또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전원입지문제의 해결방안은 어떠한가?

### Q. 발전소운영의 분할체제 고려를...

申熙星박사(동력자원연구소)  
지방자치화 시대의 도래로 그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은 유치하려하나 위해가 되는(공해시설등)은 기피한다. 서울에 발전소 지을 땅이 없으면 타 지역에 송전되는 비싼 전기를 쓸 수밖에 없지 않은가? 발전소의 건설·운영을 각도별로 분할 관리하도록 하면 어떤가?

### Q. 에너지 절약형 기기생산 의무화를

박경섭부사장(효성중공업)  
정부는 생산업체가 에너지절약형 기기를 생산하도록 계몽하고 나아가 의무화까지 해야한다. 국민에 대한 절약권고에 앞서 기기효율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 Q. 발전소 점검회수 줄여 효율향상을 김세현계장(포항종합제철)

浦鉄은 100만kW 발전설비로 보유하고 있고, 법에 따라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88년이후 점검주기를 연장하였는데 우리의 경우도 그렇게 하면 정지기간이 줄어들어 효율이 올라가고 발전소도 그만큼 덜 건설해도 될텐데...

### Q. 규제와 자율성의 조화찾을때 됐다.

徐錫天부사장(한국중공업)  
전력사업에 있어서 미국·일본등은 지역분할체제, 프랑스는 기기제작은 프라마툼과 알스툼, 전력의 전반적인 운영. EDF의 전국 통합체제로서 그들나름대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의해 구축된것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런 근본적 문제 이외의 정부규제는 최소한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도 이제 꼭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많은 규제를 풀어 효율향상의 길로邁進해야 할것이다.

## 답 변 요 지

田載豊처장 : 영국에서 전력사업을 수평분할했으나 결국 수용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전은 특정지역에 전원단지가 형성되면 불이익이 생길때 그것 상쇄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를 지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 보령댐을 건설해주는 따위이다. 이러한 지역발전사업도 어느 전원입지 주변이건간에 시행될 것이다.

CO<sub>2</sub>의 환경오염문제는 이번 전원개발 계획에서 석탄사용을 줄이고 원자력과 LNG를 늘리는 방향으로 고려함으로써 반영되었다.

앞으로 규제가 더 강화되면 2년마다 여건변동에 대응해서 계획을 조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그때 재검토될 것이다.

鄭根讓박사 : 전원입지문제 해결을 위해 '76년당시 Barge Mount 발전소문제를 검토한 일이 있다.

차세대 신형안전로 문제에 있어서 안전이 필요하다고하니 차세대원자력을 프로젝트화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전사업 특히 원자력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프로젝트만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다.

신형원자로는 지금 그 옵션이 많은 형편이며 새로운 안전개념들이 자꾸 제시되고 있는데 이미 프로젝트화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옵션의 폭을 줄이는데 아닌가 걱정된다. 과학기술의 흐름에 대한 민감한 파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원입지는 고전적인 사고만으로는 대단히 좁아진 느낌이며 폐기물 처리도 안면도 사건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오해속에서 처리되어 문제가 되었다.

전원입지, 핵폐기물 처리장, 핵주기사업등에 대한 입지문제도 차원을 달리 해결방안의 모색을 위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같은 나라는 700여개의 전력회사를 9개의 파워풀로 운영하고 있다.

파워풀간에 전기를 사고 파니까「로칼」(지역간)이라는 개념과 인식이 상통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고식적인사고(姑息的思考)를 떠나서 전체를 조감하는 차원에서 행정적인 측면과 학리적·기술적측면에서 민주화에 따른 지방화문제를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안전성 특히 원자력안전성이나 발전소계통등의 안전성문제, 그리고 이에대한 기술개발의 지원등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이다.